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출범

공광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부장

1. 금융산업 노동운동의 역사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된 때는 1960년 4.19 직후였다. 1960년 5월 대한증권거래소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을 시발로 조흥은행(6월 1일), 제일은행(6월 8일),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6월 11일), 한국무전(6월 16일, 현재의 국민은행), 서울은행 및 제일생명(6월 18일)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금융산업에서 노조가 늘어난 것은 4.19 혁명 직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동시에 자유당 정권 하에서 부정축재 기업에 편중대출을 하는 등 대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데 대한 금융계 내부의 자성이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업 노조들의 결성은 교원노조의 결성과 함께 사무직노조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최초의 금융업 노조연합 단체인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는 은행

노조들이 출발한 해인 1960년 7월 23일 결성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공동대처 필요성, 은행사용자들의 억압과 조합활동 방해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가 발발하여 정당, 사회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도 강제해산됨으로써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도 해산되었다. 군사정부는 1961년 8월 3일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발표하고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노조 형태를 단일산별노조로 재편하였다. 1961년 8월19일 전국적 단일산별노조인 전국금융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각 단위노조들은 지부로 편입되었다. 이때 재건된 노동조합들은 전국적 단결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형태로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명령에 의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과 민주성을

[표] 금융산업 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년도	1961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9
조합(지부)수	7	10	15	35	-	81	196	137	76
인원수	3,897	7,800	17,451	32,478	58,272	86,156	120,982	137,883	91,142

상실하였다. 즉, 노동조합의 재건은 그동안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조사와 계획에 의해 적임자로 지명된 9인의 재건위원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다수의 노동조합활동가들이 정부의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보다 외형적 경제성장을 위주로 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개악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크게 억제하였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출범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그해 12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조직이 기업별로 재편되었다. 1981년 2월 금융노조는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산별노조 산하의 지부조직은 단위노조로 개편하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93년에는 164개 단위노조 141,366명에 달한 적도 있으나, 이후 노조수와 조합원수가 감소하다 IMF 이후 조합원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2000년 3월 현재는 8만 여명에 이른다.

2. 산별노조로의 전환과정

기업별노조 하에서 노조활동의 한계를

느껴오던 금융노련은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회의, 교육, 결의를 통하여 금융산별노조 건설에 노력을 기울여 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금융노련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가져온 한국노총 산하 간부들의 <21세기노사관계연구회> 활동, 양노총 연맹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틀인 국제상업사무원기술노련한국협의회(FIET-KLC) 공동교육을 통하여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 요인은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노동환경에 대응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기업별노조의 무력감을 조합원들이나 조합간부들이 절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90년대 초부터 계속 요구되어오던 금융산업의 개방화와 더불어, 97년 말 밀어닥친 IMF 폭격 앞에서 맥을 못추는 노동조합의 기능, 내팽겨쳐진 노동자들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기업별노조의 행태를 조합원들이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층 수준높은 단위노조 간부들의 의지와 현 집행부의 강력한 결단이 산별전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연맹이 수년 동안 노보를 통하여, 또는

공동 교육을 통하여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별노조의 폐해를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1997년 11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였다. 이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체제추진추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였다. 1998년 3월 3일 열린 회원조합대표자정책세미나에서는 산별체제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추진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산별추진사업계획을 단장일처로 심의 확정하였다.

1998년 말에 새집행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린 1999년 1월 상임간부워크숍에서는 "연맹의 산별화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맹에 산별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1년까지 산업

별노조로 출범하기로 하였다. 1999년 9월부터 규약제정소위를 구성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1999년 11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금융산별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99년 10월부터 사업장들이 조직변경을 시작하여 2000년 3월 3일 창립대회 시에는 18개 회원조합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전조합원 수의 70%인 6만여 명이 된다.

1997년 이후 산별노조건설과 관련하여 개최한 크고 작은 회의는 29회나 된다. 또 이러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산별노조건설을 시도하여 성공했거나 실패한 사업장을 찾아다닌 적도 여러 번이다. 간부들의 산별 관련 비공식적인 모임이

2000년 3월 3일 금융산업노조 창립대회가 열렸다. 금융산업노조는 17개 단위노조와 60만명의 조합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나 연구, 자료찾아보기도 남모르는 큰 자산이었다.

3. 금융산업노조의 선언·강령·규약

우리는 선언·강령·규약을 초안에서부터 결정하기까지 크고 작은 토론을 여러번 개최하였다. 초안을 만들기까지는 1960년대 자료에서부터 다른 산별노조

의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을 토대로 수정을 거듭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선언과 강령은 다음과 같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조직대상이었다. 우리는 규약에서 '조직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선언)

우리는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민주화와 금융산업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기업과 직종을 뛰어넘어 전체 금융산업 노동자의 총의를 모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기치를 높이 올린다.

이러한 기치 아래 국제투기자본 등 자본과 반 노동자 권력의 횡포에 맞서 총 단결 총 투쟁으로 금융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강화하고 민주복지사회의 건설 및 참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찬 투쟁을 일심화한다.

아울러 한국의 노동운동 발전을 건안하여 노동자들이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앞장서며, 국내외 민주운동 세력과 유대를 깊게 하고 국제 노동운동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과 세계평화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금융산업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고용안정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고양시킨다.
2. 우리는 자본과 반노동자 권력에 대한 투쟁을 통해 국가제도 및 정책에 적극 개입하여 금융산업의 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한다.
3. 우리는 노동권 유린과 사회의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석하여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파한다.
4. 우리는 전체 노동운동의 통합을 건안하여 노동운동의 총 단결로 노동자계급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경제 투쟁에 앞장서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
5. 우리는 지위, 성, 인종을 이유로 사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암적 제도와 관행 및 비민주성을 직결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한다.
6. 우리는 국내외의 민주적 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소외 계층의 인권을 신장하고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금융산업 및 이에 유사한 업종 노동자
- 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 조합 및 지부에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금융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
-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자

'조합원 가입'은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가입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도록 하였고, 개인 및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하여 조합원이 되도록 하였다. '단체교섭 권한'에서 교섭 대표자는 산별노조위원장이 되도록 하였다.

단,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지부 대표, 즉 지부위원장(지부장)으로 해야 하나 단 위노조 대표자들의 거부감 때문에 몇번의 반복 끝에 지부장은 '지부위원장'으로 칭하기로 함)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 '체결권'에서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토록 하였다. 또 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산별노조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임된 단체교섭권자가 체결할 수 있으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토록 하였다.

지부의 필요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각 지부별로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지체없이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산별노조 전환 후에도 재정문제는 기업별 노조 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산별 논리과정에서 여러 번 재정집중과 해분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기업별노조 현형을 그대로 기기로 했다. (사진은 창립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



금융산업노조

보고하여야 한다.

4. 남은 문제 및 향후과제

산별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 노동부는 조직대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고자와 조합에 임용되어 일하고 있는 자, 금융산업에 근무한 경력자와 금융관련 자격 취득자는 조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전환 후에도 재정문제는 기업별 노조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산별 논의과정에서 여러 번 재정집중과 배분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기업별노조 현행상을 그대로 가기로 했다. 현재 1인당 조합비는 대개 통상임금의 1%정도로 평균 1인당 1만~1만5천원 정도다. 연맹가입비로 900원을 내고 있고, 한국노총 가입비로 150원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8~10%정도를 상급단체에 납부하고 있다. 의료산별노조의 본조와 지부 5:5 비율, 정액제로 할 경우 역시 다른 산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조합비 납부로는 갈수록 상급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현안을 소화해내기가 매우 곤혹스럽다. 산별노조의 재정집중 문제가 이렇게 되자 '부너만 산별'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리는 게 사실이다. 실질적인 산별 사업을 위해서는 재정의 집중문제가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연맹산하 조합비를 모을 경우 연간 100억 정도가 된다. 이 재원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산별의 힘은 엄청날 것이다.

인력의 집중 문제 역시 빨리 풀어야 할 과제이다. 조합원 8만여 명(사무원 2명 제외)의 간부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수준의 연맹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적은 수로 들이닥치는 현안을 감당하기에 매우 벅차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 재정과 인력의 집중과 효율적 사용만이 산별노조의 완성이 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노조활동이 기업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산업별, 전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놓을 때, 고용과 임금은 물론 제반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가 건설한 금융산별은 자주성·민주성·연대성으로 조직력을 극대화하여 총자본과 보수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 취약한 국내 금융산업을 보호하고 금융노동자들의 전체적인 노동조건 향상과 총체적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별 출범 후 현재 진행중인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민주노동당과 제휴하는 총선투쟁
- 2차 구조조정저지를 통한 조합원 보호
- 통일단협 체결과 주5일 근무제도 관철을 중점으로 하는 임단협 투쟁
- 초국적 자본과 감대국 이해를 대변하는 IMF와의 정책협의 폐기

- 신자유주의적 금융산업정책 폐기
- 금융산업개편관련 대정부 투쟁.

금융산업노조는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 총선투쟁 방침을 결정하고, 실천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하여 2차 구조조정 중단 등 금융노동자의 요구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선거공간을 금융노동자의 의식화 및 조직화의 장으로 만들고, 금융산업노조의 정치역량을 축적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지금 산별노조로의 전환 후 첫 입단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교섭형태를 소속 지부는 중앙교섭을, 산별로 미전환한 조직은 대각선 교섭으로 할 예정이다.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별중앙교섭단을 7인 이내로 구성하려 한다. 앞으로는 각 사업장의 상이한 내용을 감안하여 2개의 단체협약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중앙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산별수준의 '단체협약' 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별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이다.

현실적으로 사용자 단체가 없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인데,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산별노조가 1개 지부와 교섭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등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력한 집단교섭력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의료산별, 대학노조, 전교조, 한교조 등 전국단위 5개 산별연맹과 공동으로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를 위한 대정부교섭(노동부, 청와대,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제정 청원, 공청회, 공동집회, 신문광고 조정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5개 전국 산별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차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전략, 은행연합회관 입주투쟁 등 산별 전환과 동시에 여러 사안이 밀어닥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모범적이고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